

한국판 뉴딜 핵심 '청년고용 20만' ...알바로 그치면 안돼

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정부 직접 고용창출”
 ‘최장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인턴 성격 대부분
 “공극적 경제 활력 제고 필요...운용의 묘 살려야”

정부가 22일 ‘한국판 뉴딜’로 명명한 사상 초유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놔다. 공공과 민간에서 4조원가량을 들여 일자리 총합 55만개를 창출하는 안이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 최대 20만개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규 채용 중단·연기로 최근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가 최장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 공공 일자리의 경우 수입이 월 최대 18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결과, 약 90조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내놔다. 이번 대책에는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특별대책과 40조원의 기간산업 금융지원안이 포함됐다.

이 중 고용특별대책은 55만개에 달하는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이 핵심이다. 여기에만 3조6000억원의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공채 ‘칼바람’에 청년들 ‘우수수’...정부 팔 걷는 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급감한 가운데 전 연령대 중 20대가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17만6000명)를 기록했다.

특히 취업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인 20대 백수(‘쉬었음’ 인구)가 11만명 폭증하면서 세간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전전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양산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 입은 세대는 신규 구직자 세대인 청년층”이라면서 “이들이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상적인 채용 계획이 언제 나올지조차 미지수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미래에 가서는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팔을 걷어 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55만 일자리 창출안, 최대 20만개 ‘청년층 정조준’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우선 공공 40만개와 민간 15만개로 나뉜다. 그 중 총합



20만개가 청년용 일자리로 계획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정부 일자리’ 최대 10만개가 청년을 위해 설계됐다. 민간부문에선 일자리 10만개가 청년을 위한 곳으로 제시됐다.

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에 종사하는 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다.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주 40시간을 꼭 채워도 월 179만5310원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일자리 설계 자체가 주 15~40시간으로 돼 있어, 이마저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을 전망이다.

민간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취약계층 교육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청년 일 경험 지원 일자리’(5만개)는 코로나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 고용된 인턴 형태 일자리다.

각각 월 최대 180만원, 1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최장 6개월 보전해 주게 된다.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채용 여력을 보완해 청년 채용 규모를 늘려 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 절반이 ‘단기알바’...운용의 묘 살려야

전문가들도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단기 통계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해 ‘재정 살포’에 불과해질 위험성이 높으며, 청년의 미래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

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공공 일자리로 뭉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책에 포함된 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기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공돼 오던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청년 공공근로는 주급 30만원 정도로 소득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주어지는 업무가 단순 사무보조인 경우가 많아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은 게 현실이다.

청년 공공 일자리가 무의미한 재정 살포로 이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 일자리 내용과 관련해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 수요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계획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등도 단기 인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박지순 교수는 “세대 간 일자리 유지와 맞장게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시장의 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런 쪽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혁신성을 할 수 있는 제도과 규제 등의 발판이 탄력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지금의 일자리 창출도 실질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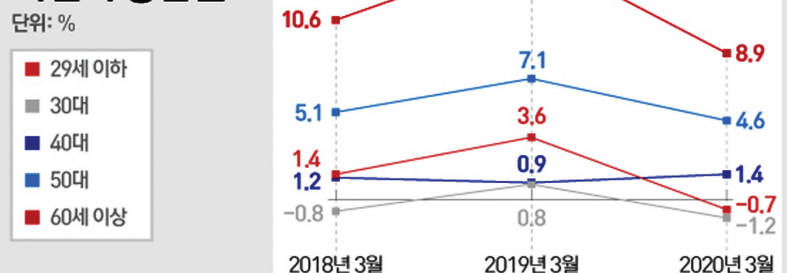
공공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계획

공공		
40만개 / 2.5조원		
디지털 정부일자리	비대면 정부일자리	실직자 일자리
10만명 / 1조원		30만명 / 1.5조원
공공데이터 구축	방역·환경보호·행정지원	방역·환경보호·산림관리
주 15~40시간		주 30시간 미만
최장 6개월·최저임금 수준		

민간		
15만개 / 1.1조원		
청년 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
5만명 / 0.5조원	5만명 / 0.24조원	5만명 / 0.32조원
콘텐츠 기획·관리, IT교육 등	채용여력 부족 사업장	특별지원업·이직자
최대 180만원씩 6개월	월 80만원씩 6개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